

# “경직된 건전재정, 지방재정 위기 초래”

김관영 도지사, 민주당 지방정부 긴급 대책회의서  
“보통교부세 등 줄어 전북도 예산 편성 과정 어려워”  
소방 인건비 국비 부담·지방소멸기금 확대 등 건의

김관영 도지사가 “정부의 경직된 건전재정 방침으로 지방재정이 위기에 놓였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지사는 27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지방정부 긴급 대책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발언했다.

김 지사는 “전라북도는 세만금 SOC 예산이 대폭 삭감되어 도민과 기업들이 예산 복원을 위해 절박하게 노력하고 있다”면서 “세만금 예산 복원을 민주당 차원의 핵심 과제로 포함해 힘

써 주고 있는 것에 대해 감사 드린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지방정부 재정과 관련, “보통교부세, 지방세가 크게 줄어 전북도의 예산 편성 과정도 힘들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전북도 예산은 올해와 내년 세입감소 규모가 1조 6880억원”이라며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초당적으로 지방 재정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지사는 이날 소방공무원의 인건비 국비 전액 부담, 지방소멸 기

금 확대를 건의했다. 김 지사는 “2024년 전라북도 소방공무원 인건비는 2874억원으로, 소방안전 교부세 334억원(11.6%)을 제외한 2540억원(88.4%)을 전북도가 부담하고 있다”며 소방의 특성을 고려해 전액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또 “지방소멸대응기금은 현재 총 122개 지역에 1조원이 투입되고 있으며, 지역별 평균 지원 규모는 80억원에 수준이다”면서 “지방소멸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예산을 대폭 늘려달라”고 건의했다. /김재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홍익표 원내대표, 김관영 전북도지사 등 참석자들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지방재정 파탄 해결’을 위한 민주당 지방정부 긴급 대책회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 민주 “권리당원 투표 비중 대폭 확대”

내년 8월 전당대회 관련... 내년 총선 현역 하위 10% 의원 패널티 강화도 의결  
비명계 “당내 민주주의 포기하고 이재명 중심 ‘팬덤 정치’ 강화하려는 포석” 비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당무위원회를 열어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뽑는 내년 8월 전당대회에서 권리당원 투표 비중을 대폭 늘리고, 내년 총선 때 현역 하위 평가자에 대한 감점은 확대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지난 24일 최고위원회에 이어 이날 당 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 지도부 중심의 100인 이하 당무위 문턱도 넘는 것이다. 친명(친이재명)계와 강성 지지층이 요구한 사항을 지도부가 주도해 강행한 것으로 당내 계파 갈등이 다시 격화하는 모양새다. 전당대회 관련 개정안은 권리당원 대의원 표 반영 비율을 20대 1 미만으로 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권리당원 60~70표가 대의원 1표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하면 권리당원의 표 가치를 3배 이상 높인 셈이다. 이른바 개발로 불리는 강성 지지층과 친명계에서는 표의 등가성 차원에

서 권리당원과 대의원의 비중을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현행 당헌·당규에는 전당대회 표 반영 비율이 권리당원 40%, 대의원 30%, 일반 국민 여론조사 25%, 일반 당원 5%로 설정돼 있다. 이를 국민과 일반 당원을 합쳐서 30% 대의원과 권리당원은 70%로 정하면서 비율 조정을 함께했다. 비명계(혁신계)는 대의원제 비율 축소 등 이재명 대표 중심의 팬덤 정치를 강화하려는 포석이라고 비판했다. 당내 비주류 의원 모임인 ‘원칙과 상식’ 소속의 김중민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이는 사실상 대의원제를 폐지하겠다는 것”이라며 “일부 유투버의 목소리, 팬덤 등을 거두고 의사결정을 하겠다는 당내 민주주의 포기 선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천을 앞둔 시점에서 결정한 점도 불만을 사고 있다. 공천 때문에 다른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틈을 타 강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민주적으로 결정하려면 내년 총선 끝나고 나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웅천 의원은 “다들 공천이 목전에 차오르는 상황이라서 감히 안 된다고 누가 얘기 하겠나”라고 했다. 하위 10% 의원들의 패널티를 강화하는 공천 규칙 변경을 두고도 잡음이 일고 있다. 민주당은 총선거확단이 지난 21일 요구한 현역 하위 평가자 패널티 강화도 최고위에 이어 당무위에서 의결했다. 내년 총선 때 ‘선출직 공직자 평가 하위 10%에 든 현역 의원의 경선 득표 감소 비율을 현행 20%에서 30%로 상향하는 것이 핵심이다. 비명계 ‘공천 현실’ 우려를 차치하더라도 총선 규칙은 1년 전에 정하기로 한 게 당의 원칙이었던 만큼 이재명 대표가 공언했던 시스템 공천 원칙이 무너졌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뉴시스

## 군산시의회, 내년 예산·기금운용 계획안 상정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는 제20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고 2건의 부의안건 의결과 2024년도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했다. 김관중 시장은 의회에서 이뤄진 시정연설에서 2024년도 예산안은 정부 추계 결과 올해 세수 결손액만 59조 1천억원에 이르고 내년에도 내국세가 10% 이상 줄어드는 흑독한 살림살이가 예고되고 있어 정부의 건전 재정 운용 기조에 맞춰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축소, 신규사업보다 필수 현안 사업의 성공적 마무리에 중점을 두어

올해보다 0.6% 증액된 1조6,445억원에 이르는 예산을 사회복지, 시민안전, 보건분야 등 예산을 확대하여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우선으로 예산으로 편성했다는 설명을 비롯한 2024년도 시정 운영 방향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이번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상정된 2024년도 예산안 심의를 각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예산심의할 계획이다. 이연화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군산시 집행부의 입법बंध 행위를 규탄한다”며 시민의 권익을 위한 의회의

입법 활동에 협력하려고 노력할 것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김경구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청암산에 미래숲을 조성해 군산을 세계적인 포레시티로 만들자”고 했다. 다음 환경보존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군산시가 군산 차인화만을 위한 예산 1,800만원을 들여 단독으로 무대를 만들어주는 특혜를 주었다며, 군산시는 군산차인화에 지급된 지방보조금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철저한 특정감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이한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차전지 특화단지 폐수 사전처리 시설 마련 촉구’ 건의안을 가결했다. /군산=김복관 기자

## 김제시의회, 2023년 행정사무감사 마무리

김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가 지난 16일부터 24일까지 9일간 이어진 2023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종료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김제시청 57개 실과소에 대해 질의 응답 형식으로 실시했으며 지난 23일에는 6개반을 편성해 19개 읍면동에서 현장행정사무감사를 펼쳤다. 24일에 열린 행정사무감사를

마감하는 강평회는 서백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이 총평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총평을 통해 기존 인구정책의 한계를 지적하며 인구유동성을 고려한 인구정책 발굴과 지역 선학당의 프로그램 강화 방안 마련, 아동과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 발굴에 노력해 달라고 제정했다. 또한 부서 간 업무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주기적 검토 관리해

조정할 것을 주문했고,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인사 문화 조성과 원스톱 민원 처리 담당자 지정 등 검토해 민원인들의 편의 증진에 힘써 줄 것을 제정했다. 의원들은 김제사랑상품권의 내실 있는 운영 주문과 관내 기업의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는 맞춤형 사업 시행, 복지 관련 민간위탁 기관에 대한 철저한 지도 감독, 김제유연 관광개발 사업 투자 협약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김제=곽도태 기자

## 비명 원외모임 신당 창당 선언 ‘이낙연 신당’으로 이어지나?

민주주의실천행동 ‘용산·개말 전체주의 거부’  
반윤·반명 중도층, 비윤·비명계 원외인사 모여  
민주 혁신모임 ‘신당 창당은 불투명’ 의견 우세  
실천행동측 ‘친이낙연계만 있는 게 아냐’ 등 설명

이낙연 보좌관들이 주축이 된 더불어민주당 원외 모임 ‘민주주의 실천행동(실천행동)’에서 신당 창당 준비를 언급하면서 이른바 ‘이낙연 신당’으로 이어질 것이라 관측이 당 안팎에서 나온다. 실천행동은 지난 26일 토론회를 열고 결의문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정치·정당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 행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들은 “다른 사람의 목소리와 삶을 존중하는 다원주의에 가치를 분명히 세우고 민주주의를 실천한다”며 ‘말의 자유에 칼을 대는 용산 전체주의를 거부한다. 폭언과 막말로 이권을 색출하는 개발 전체주의를 거부한다. 스스로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세계를 꿈꾼다’고 강조했다.

포에서 활동했던 김효은 전 선대위 대변인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라는 대권 주자를 앞세운 신당 출현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이재명 대표 체제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당원들 뿐 아니라 혁신모임 ‘원칙과상식’ 또는 이 대표 체제에서 공천 등 불만을 느낀 인사들이 신당으로 합류할 수 있다는 논리다. 특히 실천행동에서 강조하고 있는 ‘과거에 머문 정치’, ‘강성 지지층 등에 따른 극단주의’ 등이 민주당내 혁신 목소리와 유사한 기초를 띄고 있다는 점도 가능성을 더하는 근거로 제시된다.

하지만 현역 의원 모임인 비명계 혁신모임은 이들과는 결이 달라 비명 원외계의 신당 창당은 불투명하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원칙과상식 측에서는 즉답을 피하고 있다. 한 의원은 “이와 관련 뉴시스에 ‘아직 고민해보지 않아서 모르겠다’고 밝혔다. 또 실천행동 관계자는 신당 창당이 이낙연 전 대표의 행보와 관계 없이 추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신당 창당 선언 하루만에 예비당원이 5000명 정도까지 모인 상황이기도 하다.

한 실천행동 관계자는 뉴시스의 의사와 절연해야 한다”며 “선동 유투버, 음모론과 절연하고, 개발과 절연해야 한다. 이들을 교호하는 선동, 부패 정치인을 예외없는 당헌, 당규, 윤리규정을 적용해 퇴출해야 한다”고도 했다. 실천행동에는 친이낙연계로 분류되는 신경민 전 의원의 보좌관 출신 박병석 모색과대안 대표와 지난 대선 당시 이낙연 전 대표 캠프

“사회과 지역화 교과서  
주민과 함께 만들어야”  
이정린 도의원, 도내 14개  
시군 교육지원청 예산심사서

도내 14개 시·군지역 지역화 교과서 개발·보급이 요직행위로 보여져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북도의회 이정린(남원1·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도내 14개 시·군교육지원청에 대한 예산심사에서 “관내 학교 교원들이 지역화 교과서를 개발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된다”면서 “개발해야 하니까 개발하는 교과서가 아닌 지역주민과 학생들이 참여할 민·관·학 개발이 이뤄져야만 할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202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14개 시·군교육지원청의 사회과 지역화 교재 개발 사업 예산을 살펴보면, 모두 관내 교원들이 참여해 협의회 수당과 검토 수당을 편성했다. 협의회 수당은 1인당 1만5,000원, 검토 수당은 1인당 4만원으로 편성했다. 하지만, 이들 모두가 교원이라는 점을 이정린 의원은 지적했다. 이정린 의원은 “지역화 교과서는 지역민들과 학생들이 더 잘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때가 되면 자리를 이동하는 교원들이 지역화 교과서를 만든다는 발상 자체가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협의회 수당을 지급하는 횟수는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많게는 4회 교원 1인당 총 6만원의 협의회 수당을, 적게는 협의회를 1회 진행할 계획이라고 예산안에 적시해 왔다. 이 의원은 “짜여진 예산으로 협의회 개최 횟수를 조정할 것인지, 아니면 협의회의 중요성을 몰라서 그러는 것인지”라면서 “그렇다면,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잘 아는 지역주민들은 협의회에도 참석을 못하는 것이냐”면서 “교원들이 일방적으로 개발하는 교과서는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강하게 질책했다. /김재훈 기자

## 도의회 상임위, 내년 예산안 심사

## 농산경위 “연구개발국 등 신규사업 세부내용 없어”

## 농업기술원 대상

전북도의회 농업경제위원회(위원장 나인권)는 27일 제405회 정례회 기간 전라북도 농업기술원에 대한 2024년 본예산 심사를 실시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24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48억1,000만원보다 23억6,000만원이 증액된 271억8,000만원이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606억보다 5억1,000만원이 증액된 656억2,000만원으로 편성됐다.

농업기술원에서 청년농 기술 지원 등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은 직접 지도해 달라” 주문했다. 김동구 의원(군산2)은 “농업기술원의 연구실 안전관리 사업에 관해 7~8월 집중 호우기간 누수 발생으로 많은 피해가 예상되는바 즉각적인 조치를 할 것”을 당부했다. 김희수 의원(전주6)은 “새만금 간척지 경관조성 연구 사업과 관련해 1억2,000만원의 순도비가 지원되고 있는 데 간척지 개발 후 수해지인 새만금개발청이나 농어촌공사에서 예산 지원을 받아 추진해야 된다고 판단된다”며 “향후 새만금개발청이나 농어촌공사와 협력을 통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 전북선관위, 총선 선거연수회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4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국제회의장에서 전직원이 참석한 내년 4월 10일에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성공적 관리방안을 모색하는 선거연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정한 선거관리 △철차사무 역량 강화로 투·개표사무의 정확성·투명성 제고 △염증증상 신속한 조사·조치로 건전한 선거기반 조성 등을 중점으로 각 분야의 관리방안을 사담했다. 또한, 새로 개선된 사전투표장비를 시연 및 체험하고 성공적인 선거관리를 위한 주요 현안을 심도있게 토의했다. /김재훈 기자

서난이 의원(전주9)은 “농업인 조직·교육훈련 지원 사업과 관련해 시·군 매칭사업과 순도비 사업으로 이분화 되어있다”며 “시·군 매칭사업은 해당 시·군에서 전담하고, 농업기술원 직접 사업을 강화하는 등 사업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며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오은미 의원(순창)은 “농촌여성 안전 향상 보조금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농업기술원은 여성농민들에 대한 사업은 생활 개선위주로 행정편의적인 사업을 진행해왔다고 판단된다”며 “다양한 여성 농민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노력해 달라”고 했다. /김재훈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지름길